

### 국방부 과거사위, 12·12, 5·18 사건 조사결과 보니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 박창일 위원이 12·12, 5·17, 5·18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89년 민간사찰 '청명계획' 확인

### 5·21 발표자 규명 못해...5·18 핵심 진상은 비켜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과거사위)는 24일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12·12 군사반란>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연행하려고 계획했으며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12월13일 새벽 5시, 이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12월12일로 소급해 적었다.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

수부대가 이동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중재 2군사령관, 전두환 합동수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현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그러나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에서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5·21 발표를 직접 명명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1990년 10월4일 '윤석양 이병 양심 선언'으로 드러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보안사 3처는 1989년 3월20일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유보와 같은 달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1989년 4월 '청명계획'이라는 계엄대비계획을 마련했다.

청명카드에는 별도 관리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빠져있으며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사찰카드를 빼내 공개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이강철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 문동환·박찬재 등 4명에 대한 사찰카드를 누락돼 있다. /연합뉴스

### "12·12는 '군사반란'... 무더기 훈장 박탈해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이 받은 훈장을 박탈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권고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수여된 훈장은 5.18 특별법과 상훈

법에 따라 전원 박탈했지만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자만 서훈이 취소됐다는 것. 특히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되는 무공훈장을 12·12 관련자들은 '계엄업무 및 국가 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받았으

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과거사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서훈 문제는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이지만 행정부에서 국방부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거액 몸값' 협상 변수 가능성

## ■ 탈레반 돈 요구... 협상 '변곡점' 맞나

### 금전 문제 수면 위로...석방 협상 급물살 탈 듯

한국인을 납치한 탈레반이 24일 피랍자 접촉 대가로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향후 석방협상 과정에도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정부측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탈레반이 한국 정부에 피랍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대가로 1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이 실제로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납치사건 발생 7년 만에 처음으로 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탈레반의 10만달러 요구가 사실일 경우 별다른 진전없이 정체를 있는 한국인 석방협상에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탈레반은 한국인 석방 대가로 가즈니주(州) 내 수감 탈레반 무장대원을 모두 풀어달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인질 접촉 대가라는 꼬리표 아래 10만달러가 제시된 것은 탈레반이 이번 사태 이후 금전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탈레반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탈레반 최수에 대한 석방 권한을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신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은 결국 돈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외국정부가 자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될 경우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탈레반

을 비롯한 각국 테러단체에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

일례로 독일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라크에서 납치된 독일인 기술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해 1천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고 공영 ARD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 탈레반도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사진기자 가브리엘레 토르셀로를 납치했다가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200만달러를 받고 풀어준 바 있다.

탈레반이 현재 군자금에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탈레반이 석방 조건을 몸값으로 바꿀 경우 이번 한국인 납치 사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정부가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 교환 제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다 독일 등 주변 관련국들도 무장세력과의 '불타협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석방협상 여건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테러단체에 지불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지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 ■ 대변인 '아마디' 믿음만 한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카리 유세프 아마디 탈레반 대변인의 신뢰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 현지 언론인들은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마디는 이번 납치 사건 전에도 오랫동안 탈레반 관련 사건과 관련된 외신 보도에서 대변인으로 자주 등장해왔으나 지하조직처럼 움직이는 현 탈레반의 형편상 아마디가 실제 대변인인지 여부는 공식 확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이번에 한국인과 함께 납치된 독일인 인질들에 대해 아마디가 2명 모두 처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명만 죽고 1명은 살아 있다고 반복하고 그가 내건 인질 석방 요구조건도 다

## 창구 단일화...현지언론 "신뢰할 만하다"

른 지역 탈레반측 대변자의 요구와 달라 그의 실체나 신뢰성을 놓고 의혹이 일기도 했다.

외신 보도에서 피랍자 석방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그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논란은 사태 해결에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현지언론의 한 기사는 "100% 신뢰할 수 없지만 탈레반의 유일한 공식 대외창구인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협상 전략 차원에서 종종 말을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의 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인을 납치한 조직은 탈레반의

여러 지역 조직 가운데 하나로 아마디 대변인이 그 조직에 직접 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의 발표 외엔 탈레반은 다른 대외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탈레반의 대변인은 아마디 외에도 다비엘라 무자히드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디가 더 대변인 직책을 오래 맡아 그의 말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아마디는 아프간 남부와 동부, 남동부 지역 조직을 담당하고 무자히드는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납치사건은 아마디의 관할 지역이 맞다는 게 현지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연합뉴스

## 미국, 개입 못하고 원칙론만 고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인질 23명 납치사건과 관련, 적극적인 개입을 삼간 채 원칙론만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설불리 개입했다가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온갖 비난이 미국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지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테러범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협상과 양보하지 않겠다고 원칙론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워 온 것도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의사를 표명하지 않

는 이유중 하나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은 사건 발생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닷새가 지난 23일에야 한국인 23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언급을 했다. 외부에 공개한 미국의 첫 공식반응이었다.

손 맥코믹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무고한 시민들"이며 "그들은 즉각 석방돼야 하며, 이 문제에 긴밀히 대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이날 "한국인 납치 사태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커다란 우려 사항"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사태해결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해 한미 간에 모종의 타개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미대사관의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24일 "미국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 무장세력이 요구하는 탈레반 수감자와의 맞교환이나 몸값 지불 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아년게 아 나라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기자 구출을 위해 탈레반 수감자 5명을 석방했을 때 미국은 카르자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Moda Gallery Summer Special Sale'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It features various interior design items like sofas, chairs, and tables, with prices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Advertisement for 'HANIIL' (한일카) featuring a large cruise ship. It promotes travel services, including 'HANIIL EXPRESS' and 'HANIIL TOUR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in Korean.